

도시철도공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

〈16일〉

〈17일〉

광주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의정활동 개시

22일 본회의 시정질문 ... 1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대선으로 그동안 '개척휴업' 상태였던 광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를 열고 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는 청문 자료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를 위촉하고 인사청문회의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를 검증한다. 시의회 도시철도공사 인사청문위원은 문태환 위원장을 비롯, 김동찬·조오성·반재신·조세철·김민중·김욱자 의원 등 7명이다.

경과보고서는 오는 22일까지 예정돼 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 오는 17일 열리며 22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인사청문위원들은 문상필 위원장을 비롯한 김보현·주경남·유정심·심철의·박춘수·이미옥 의원 등이다.

시의회는 또 22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밀렸던 시정질문과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시정질문은 5명의 시의원이 나설 예정이며 23~26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아직 선인이 되지 않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와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광주시의회 4층에서 열린다.

전국시도의회의장과 시장, 시도의회 및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현안 등을 논의하며 5·18 현장 견학에도 나선다.

정례회는 다음달 1일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예정돼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대선으로 뒤로 미뤄 놓았던 일정들을 소화해야 한다"며 "새정부 아래에서 어느 때보다 바쁜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0원 택시' '꿈사다리 공부방' 등 전남도 우수시책 전국화 가능성

이낙연 총리 발탁에 지역 대선공약도 탄력

지역 대선공약도 탄력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 이낙연 전남지사가 내정됨에 따라 이 지사가 추진한 '100원 택시', '꿈사다리 공부방' 등 서민정책' 등 전남 우수시책을 전국화될 전망이다. 지역 대선 공약과 현안사업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 한 꿈사다리 공부방, 악성 채무 탕감, 금리 인하 등도 정부 시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가 미래셋으로부터 1조 원대의 투자를 이끈 여수 경도 개발사업 역시 현안인 광양만권경제구역 편입도 시간만 남았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목표를 잡았으나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부처 간 이견으로 표류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의 무안국제공항 경우, 흑산공항 건설 등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외에 이 후보자가 지사를 맡으면 공을 들인 전남과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사업, 무안공항 활성화 등 역시 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100원 택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적 있다"며 "넓은 의미의 복지시책, 서민시책이라고 부른 50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해박서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과감하게 유관부처에 권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행정을 해보니까 정책 시책 확립에 있는 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틈에 있는 수많은 시책들이 잠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이런 거 해보니까 관청더라고 전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과감하게 시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대통령, 사전투표 절반 석권

19세·20대 비중 23.9% 최고

지난 4~5일 이틀간 실시된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절반을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19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에서 문 대통령은 46.1%에 해당하는 510만 911표를 획득했다.

이번 대선의 전체 유권자 4247만 9710명 중 26.1%에 해당하는 1107만 231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절반에 육박하는 득표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최종 득표율(41.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층 비율이 높은 젊은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사전투표 참여자 중 19세와 20대(이하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40대의 비중은 17.4%, 18.7%였다.

연합뉴스



빛고를 안전체험 한마당 11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전시관에서 열린 '2017 빛고를 안전체험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마재운 광주소방본부장, 한국 119소년단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2032년 22대 대선때 유권자 4519만 8147명 '정점'

60대 이상이 40% 차지... 25대 대선 60대 이상 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5년 뒤인 2032년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로 유권자도 나이가 들면서 2032년에는 유권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이 되고 그로부터 15년 뒤에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별다른 개편 없이 앞으로 5년마다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권을 지닌 만 19세 이상 인구는 2032년 제22대 대선 때 4519만 8147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9월 치러진 제19대 대선 때 유권자 4247만 9710명보다 6.4%(271만 8437명) 늘어난 규모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차기 대선인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만 19세 이상 인구는 4397만 4799명, 2027년 4474만 1003명에서 2032년까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전체 인구가 2031년(5295만 8000명)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며 대선 유권자도 감소한다.

제23대 대선 때인 2037년에는 만 19세 이상 인구가 4516만 4171명으로, 5년 전보다 0.08%(3만 3976명) 줄어들고 2042년 4471만 8844명, 2047년 4390만 3366명으로 감소한다.

2062년이 되면 만 19세 이상 인구는 3894만 6046명으로 4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다. 대선 유권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4000만명을 밑도는 적은 2007년 17대 대선

(3767만 1149명)이었다.

유권자 구성도 고령화된다. 올해 대선에선 60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24.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0대(20.6%), 50대(19.9%), 30대(17.6%), 19~29세(17.5%) 순이었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2032년에는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 19세 이상 인구의 40.3%로 올해보다 15.9%포인트 확대되는 반면 다른 연령대 비중은 일제히 쪼그라든다.

60대 이상 다음으로는 50대가 17.9%로 그 뒤를 잇고 40대(15.2%), 30대(15.1%), 19~29세(11.5%) 순으로 나타나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비중이 커지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난다.

연합뉴스

간척지서 벼 대신 밭작물 재배면 임대료 50% 인하

정부, 변동임대료 도입

올해부터 간척지에서 벼 대신 다른 밭작물 재배로 전환하면 임대료 50%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에 현행 고정임대료 부과 방식 이외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 및 임대 기간 연장을 내용의 관련 훈령을 개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 기간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정임대료 방식은 밭작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매년 당해년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변동임대료 방식이 도입되면 임차인(농업법인 등)은 임대 계약을 할 때 고정 혹은 변동임대료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개로 간척지에서 벼 이외의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벼 재배지 중 조수로 등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그 첫해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2~5년 차에는 임대료를 기존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 밭작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농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간척지 임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해 밭작물 재배 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